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 개발과 해외 진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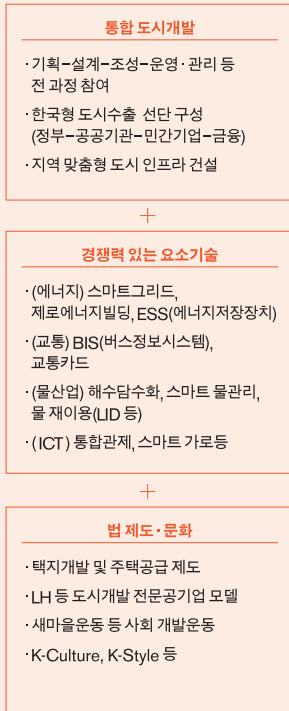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
2016.7.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규 유망 수출 품목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형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발표하였다.

‘스마트 시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체계와 ICT 등 경쟁력 있는 기술 및 관련 제도·문화를 패키지화한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진출 전략과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내 스마트 시티를 고도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관심이 높은 스마트 시티 서비스 네 가지를 시범 적용하는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자립섬, 태양광 발전 등이 적용되는 에너지 중심 스마트 시티를 전국 13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 구축 방향



K-Smart City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안)

대상지구	스마트 시티 서비스	시범단지 콘셉트	
세종	도시 토털 솔루션 제공 공공자전거, BRT 우선 신호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3D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스마트 가로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그리드 (한국전력공사) 스마트워터그리드 (한국수자원공사)	Smart City Full Package	교통 안전 도시 관리 에너지
동탄2	에너지·경제·일자리 마이크로그리드(MG)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 시티 R&D 단지 도입	Smart Energy	에너지·환경 (MG·태양광) 일자리 (ICT·IoT)
판교	상업·문화·관광 증강현실(AR), 공공 Wi-fi 도입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BEMS, BIPV 등	Smart Entertainment	여가 문화 쇼핑
평택고덕	안전(교통·범죄) 스마트 속도감지(DFS) 스마트 가로등·횡단보도 스마트 단속카메라 스마트 교차로	Smart Safety	교통 안전 범죄 안전 취약계층 안심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2016.7.19.

카셰어링 활성화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 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 *에 이용될 경우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 조례 근거 마련 |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호텔과 면세점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용 규정 |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하였다.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 주차장 확보 부담 완화 | 고장 또는 노후화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될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 완화 |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하였다.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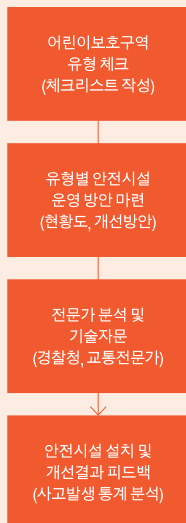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가능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2016.8.11.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활용 방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비 방안이자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표준모델은 총 6개 유형으로, 간선도로·국지도로별로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횡단 안전성’ 등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A·B·C 타입으로 나누게 된다.

구분	표준모델 유형(예시)		
간선도로	A-type	B-type	C-type
국지도로	A-type	B-type	C-type

유형 분류 기준

① 도로의 기능 : 이동성, 접근성

② 보행 안전성 : 보·차도 분리, 보도폭 확보, 보도 연결 양호 여부

③ 횡단 안전성 : 횡단시설 유무, 무단횡단 억제, 시인성 확보 여부

표준모델 유형

A-type : 보도설치 등 보행 안전성은 있으나 도로횡단 시 안전성이 미흡한 경우

B-type : 도로횡단 시 안전성은 있으나 보도 미설치 등 보행 안전성이 미흡한 경우

C-type : 보행 시 안전성과 횡단 시 안전성이 모두 미흡한 경우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유형별 공통 필수시설’과 지역 도로·교통환경에 따라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유형별 선택시설’을 제시하여, 각 유형에 따른 안전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 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운영·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국민안전처는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실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 효과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 2014년 4명에서 2015년 8명으로 증가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박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위원회 도시환경과
2016.6.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위원회 도시환경과
2016.7.18.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2016.7.18.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2016.8.25.

정부, 새뜰마을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과 세종시 조치원을 침산지구에서 '새뜰마을사업' 기공식과 민간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내 쪽방촌이나 달동네 등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의정부와 경계 지역에 위치한 양주시 남방동은 1971년부터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환경이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변 역세권 개발에서도 제외되어 도시가스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못한 지역이다. 세종시 조치원을 침산리 또한 건축물 대다수가 6·25전쟁 직후에 건축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에 취약하였다.

두 지역은 2015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마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올해부터 가로환경 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등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완원시 용산마을, 진안군 용포마을, 무주군 마산마을, 순창 백암마을 등 4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어 총 36억이 투입되며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노후 하수시설 정비, 소공원 심터 조성, 담장 등 주거지 정비, 다목적센터 신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전라남도는 '서민배려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관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단순 미관 개선이나 도배와 장판 교체보다는 주택 구조 및 전기·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단열, 누수, 부엌·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 안전과 생활편의를 동시에 갖춰 주는 주택 개·보수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 시·군, 주택건설협회 등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벌여 주택 노후도, 시급성, 시·군 의견 등을 수렴해 112가구(평균 연령 71세)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대상자와 개·보수 일정을 협의해 동절기 전까지 주택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2016.8.4.

지난 2월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본격 작동된다.

공공디자인법은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용품이나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공공디자인 구역 ▲공공디자인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공디자인 구역의 참여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공공디자인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방법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견 수렴과 공고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는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구역 발주 현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실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구역의 참여 기준 | 공공디자인 구역 발주와 관련해 구역 발주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1명, 5,000만 원 이상부터 1억 원 미만인 경우 2명, 1억 원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 등이 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사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원·육성 대상이 된다.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전담 조직과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축 대형 건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6.7.21.

서울시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심의기준'을 7월 21일부터 변경고시하고, 개정 사항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도심 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을 개선해 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확보 비율이 상향되는 등 에너지 생산·절감과 관련된 의무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생산·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 강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에너지 생산 절감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 ※ 신재생에너지를 12%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 감축 설계 시 감축량, 열병합발전·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
	전력부하량의 80% 이상 LED 조명기기 설치	전력부하량의 90% 이상 LED 조명기기 설치 ※ 가로등과 보안등은 UCD조명 가능
	대기전력 차단장치 도입	콘센트 개수의 70% 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건물 에너지관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도입	기본 기능 및 가시화, 분석·진단,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이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을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의 엔진 공회전 등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장 대기 질을 관리해야 하며,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 제품으로 설치하여 운영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 전력을 차단시켜 전기 사용을 절감시키는 장치

주민참여형으로 진화하는 도시재생

대구시 도시재생추진과
2016.7.1.

대구시 도시재생추진과
2016.9.2.

부산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2016.7.20.

대구시, 주민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추진

대구가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대구시의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유형은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원하는 골목단위 재생사업인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민주도의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협의체 초기 구성 및 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주민조직 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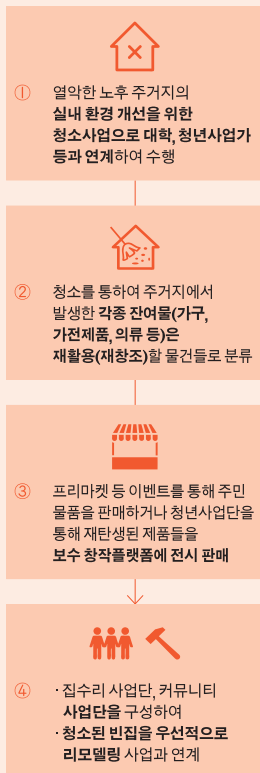
지난해에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동구 청구 삼거리 주변대로변 등 3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구·군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8월 말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5개 사업에는 총 1억 2,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 컨설팅과 도시재생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2016년도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대상지

구분	대상지역	사업내용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서구 원대동 경일중학교 복편	원대동 주민센터 및 꽃밭 조성
	남구 대명3동 실인고등학교 동편	대명동 LED 보안등 교체 사업
도시재생 주민조직 활동 지원사업	서구 원대동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주민협의체' 지원
	북구 대현동	마을지도 그리기 및 골목 식물원 조성을 위한 '대현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지원
	수성구 상동	상동 이서공원 마을잔치 추진을 위한 '상동 한들 주민협의체' 지원

웃고시 프로젝트 진행 방법



부산시,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도시재생 '웃고시 프로젝트' 진행

주민, 지역단체, 청년사업단이 연계하여 주거지 내 좁고 열악한 실내 환경을 스스로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 '웃고시 프로젝트'가 부산시 중구 보수동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웃고시 프로젝트는 폐·공가 청소를 통해 재분류된 물건을 프리마켓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집수리사업단을 구성하여 청소된 집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보수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집수리사업단 '바꾸미'와 청년예술가 집단 '협동조합 가꿈'을 비롯하여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생 등이 참여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중구청 소유의 공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웃고시 사업단의 거점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최대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문화 진흥을 위한 한옥체험·한옥주거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2016.8.25.

서울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2016.8.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경관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2016.8.23.



서울시 공공한옥 '북촌한옥센터' 전경



세종시 한옥마을 조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릉시, 강릉 한옥체험단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와 강릉시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내외국인들에게 한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릉 오죽헌 인근에 '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한다. 한옥 체험단지는 201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총 51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 5,237㎡에 한옥체험시설 12개 동(객실 수 19개, 수용 인원 168명)이 조성된다.

한옥체험단지는 대청·툇마루·누마루·온돌방·안마당 등 한옥 고유의 공간 특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팔작지붕·맞배지붕 등 전통적 지붕 형태와 겹집형 구조 등 한옥의 다양한 모습을 충실히 구현할 예정이다.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에 '서울 공공한옥' 운영

서울시가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매입해 꾸준히 늘려 온 '서울 공공한옥'을 브랜드화하고, 누구나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공공한옥은 한옥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는 숙박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 공방 전통문화체험관 등으로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운영자로 선정된 장인·공예가들의 작품과 작업 모습을 볼 수 있고, 직접 전통공예작품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한옥은 새로운 안내 표지판을 통해 표시되며 한옥의 명칭, 개방시간, 휴무일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해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도울 예정이다.

세종시 한옥마을 공급 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에 조성될 최초의 한옥마을 42필지의 공급을 개시하였다.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한옥마을 부지를 한옥 건축에 적합하게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입주자는 전통양식을 충분히 따르면서도 냉난방·단열 성능을 높인 신 한옥 형태의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을 준수하고,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선정한 전문위원의 조언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세종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CPTED 사업 범죄예방효과 탁월, 확대 시행 추진

경상남도 건축과
2016.7.29.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6.8.5.

경상남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확대 시행

경상남도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2015년에 창원시 월영동 일원과 밀양시 밀양여고 주변에 CPTED 기법을 적용한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 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 디자인을 통해 좁고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바꾸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범죄두려움 감소(84%)와 더불어 범죄 예방효과(78%)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천·김해·밀양시와 하동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7월경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사업 추진 방향 정립을 통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CPTED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동선동에 설치된 '안전확성기'



노원구 상계3·4동의 '노후계단 비추미'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6곳 추가 조성 완료

서울시가 ▲마포구 염리동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용산구 용산2가동 4곳에 이어 ▲금천구 가산동(소공장 밀집지역) ▲강북구 삼양동(공·폐가 상존지역) ▲노원구 상계3·4동(외지인과 갈등지역) ▲동작구 노량진1동(고시촌 지역) ▲성북구 동선동(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양천구 신월3동(주취폭력 빈번지역) 등 6곳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확대 시행된 6개 지역에는 각 지역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여성 1인 가구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성북구 동선동에는 옹벽과 바닥에 조명을 연속적으로 설치해 어둡던 골목길을 밝히고, 곳곳에 '안전확성기' 버튼을 설치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4곳의 범죄예방 효과를 조사한 결과, 중랑구 면목동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112 신고 건수가 줄었으며 면목동도 서울시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용산2가동의 경우 강도와 성폭행 같은 중요범죄가 22.1%나 감소했으며, 폭력 등 기타범죄도 12.9%가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도 서초구 반포1동, 성동구 용답동 등 5곳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조성된 6곳을 포함해 조성 완료된 총 10개 사례를 사례집으로 엮어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